



왼쪽부터 악수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2000년6월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2007년 10월2일)

/연합뉴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화원 영빈관에서 10.4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일부

반세기 분단 벽 넘은 DJ, 평화·번영 틀 구축한盧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되돌아본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민족화해·이산가족 등 협의
노무현, 관계발전·평화 선언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날이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방북한다.

첫 번째는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두 번째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난 자리였다.

김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최고당국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족화해와 통일,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 이산 가족문제 등 4가지 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역대 평양 남북정상회담 비교				
2000년	2007년	2018년		
일자 남북정상 정상회담 장소 행운 행사 참관 공연 관람 생중계	6월13일~15일 김대중 대통령 - 김정일 국방위원장 둘째날 오후 정상회담 오후 늦게 합의문 서명 북한 평양 백화원 영빈관 - 서해 직항로 이용 방북	10월2일~4일 노무현 대통령 - 김정일 국방위원장 둘째날 두차례 정상회담 합의문은 마지막날 서명 북한 평양 백화원 영빈관 - 경의선 육로 이용 방북	9월18~20일 문재인 대통령 - 김정은 국무위원장 첫째날 오후, 둘째날 오전 두차례 정상회담 예정 북한 평양 백화원 영빈관 혹은 노동당 본부 청사 회의실 - 서해 직항로 이용 방북 예정 평양 국제비행장 '순안공항'에서 김 위원장 직접 영접 예상 정상회담 전 김영남 상임위원장 만남 남포 사해길문, 평화자동차 참관 주요시설 철관 예정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관람 가능성 영접, 환담, 정상회담 모두발언 등 생중계 예상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첫 대면 생중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첫 대면 생중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부분에선 정상 회담을 계기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항만·전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남북간 신뢰구축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함을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는 광복 55주년을 맞아 8월 15일을 기해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기로 의견을 나눴으며 이에 따라 광복 절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 분단 이후 단절된 남북 대회를 재개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면 2007년 남북정상선언은 정치화해, 평화, 경제협력 등의 성격이 뚜렷하다.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남과 북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발표하고 구체적 이행문제를 협의했다.

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해주지역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 항 개발, 서행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등 서해지역에 포괄적인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한 것. 긴장과 갈등의 바다인 서해를 '군사적 대치'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해 형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남북 정상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정상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실질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고, 이후 관계국과 논의해 종전 선언을 실현키로 했다. 이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밖에도 남북정상은 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남북간 협의틀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양측은 10·4 선언 실천이 남북관계 발전에 확고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이행의지를 재확인했다.

/구서윤·나유리 기자yuni2514@metroseoul.co.kr

먼저 민족화해와 통일문제에 대해선 남북 최고당국자가 솔선수범해 상호 체제를 존중하며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북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교착상태 남북에 '비핵화' 실마리 가져올까

文 대통령, 평양 첫 방문

만남 이후 UN총회서 트럼프 회담

18일 평양으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는 '가장 무거운 의제'인 비핵화의 실마리를 풀고 마음 편히 귀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한 차례 더 만나고,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된 이후 지금 까지 한반도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바로 '비핵화' 때문이다.

북한은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를,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을 각각 내세우며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세 번째 만남이자 평양정상회담은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개다가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들고 온 '비핵화 선물'을 갖고 추석 연휴 기간 미국 뉴욕에서 예정된 유엔(UN) 총회에 참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완벽하게 중재에 나설 경우 한반도는 어둡고 긴 터널을 서서히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DDP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면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이 일정상 특징적인 것은 회담 직후 뉴욕 UN 총회가 있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고문 대통령이 가시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등과 관련해서 (남북) 두 정상이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느냐, 결국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또 계기가 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지면서 평양정상회담과 곧바로 이어지는 UN 총회 기간동안 국무총리가 직접 국정의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

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비핵화가 종전선언,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 해소 등으로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이 좀더 본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평양으로 향하기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정상회담 목표의 나라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남북 사이에서 전쟁의 공포를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비핵화 못지 않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과제다.

문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더불어 중요한 과제로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석 실장은 이에 대해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협의는 판문점선언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그동안 양군사 당국 간에 많은 논의도 해 왔다"면서 "몇 가지 조항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무력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이런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균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 상봉, 전수조사를 통한 생사 확인, 화상 상봉 등 보다 실질적인 조치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방북기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비상연락망도 가동키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차분한 분위기 속 간간히 환영행사 준비

평양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평양 거리는 평상시처럼 차분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해 지난 16일 평양에 도착한 정상회담 남측 선발대에 따르면 평양 거리는 정상회담을 알리는 플래카드 등도 보이지 않는 등 어느 때와 다름없는 분위기다. 다만, 정상회담 기간 환영행사 등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행사장 주변에서 간간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한다.

정부 및 취재단 선발대는 전날 오전 6시 50분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과해 북측이 제공한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오전 8시 20분 개성에서 출발해 평양까지 총 170km를 달렸다.

왕복 4차로 도로는 곳곳이 패여 있어 시속 6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었다. 특히 최근 많은 비가 쏟아져 도로 사정이 더 안 좋아졌다는 전언이다.

도로 곳곳에서는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도로변 주유소는 개성공단에 있는 오일뱅크 한 곳이었으나 이곳도 폐쇄된 상태다.

고속도로 양방향으로는 지나가는 차량이 거의 없었다.

선발대는 오전 10시께 평양까지 85km를 남겨둔 지점인 은정휴게소에서 40분간 휴식했다. /평양공동취재단·김승호 기자